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투톱 외교’ 적극 관심을”

文 대통령 “정상 외교 수요 폭증, 대통령·총리 역할 분담 총리는 행정 각부 통할... 정상급 외교 할 수 있는 위상 정부 부처, 총리 순방 외교 더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해 정상급 외교에서 함께 될 필요가 있다”며 ‘투톱 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이나연 국무총리는 우리 정부를 대표해 방글라데시,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타르 등 4개국을 공식 방문 중”이라며 “이 총리는 지난해에 총 7회 13개국을 순방했고, 올해는 이달까지 3회 11개국을 순방하며 함께 24개국을 순방하게 된다. 대부분 내가 먼저 방문하지 못했거나 당분간 방문하기 어려운 나라들로서 실질협력의 필요가 매우 큰 나라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지만 독특하게 국무총리를 두고 있고, 헌법상 총리에게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따라서 우리의 국무총리도 정상급 외교

를 할 수 있는 위상을 갖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들이 국정에서 외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며 “4개국 중심의 전통 외교에 더해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 등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외교의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상 외교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대통령 혼자서는 다 감당하기가 어려워졌다”며 “그래서 대통령과 총리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해 정상급 외교에서 함께 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총리의 헌법상의 위상대로 ‘책임 총리’의 역할을 하도록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내가 총리 해외순방에 대통령 전용기를 제공한 것도 단순한 편의 제공의 차원을 넘어 총리 외교의 격을 높여야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국무총리의 정상급 외교

는 우리 외교의 외연 확대 뿐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윤러 “실제로 대부분의 나라들은 정상 외교를 ‘투톱 체제’로 분담하고 있다”며 “의원내각제 국가들은 국가원수인 대통령과 정부를 주관하는 총리가 각각 정상 외교에 나선다. 입헌군주제 국가들은 국왕과 총리가 함께 정상 외교에 나서고, 사회주의 국가들도 국가주석과 총리가 정상 외교를 나눠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께서도 대통령의 해외 순방 뿐 아니라 총리의 순방 외교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언론에도 마찬가지로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외교부 뿐 아니라 정부 각 부처에서도 총리의 순방 외교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뒷받침해주시길 바란다. 총리의 순방 외교를 ‘투톱 외교’라는 적극적인 관점으로 봐주시길 바란다”며 “정상급 위인이 방한할 경우에도 국무총리의 외교적 역할을 넓힘으로써 상대국과의 실질협력 확대를 촉진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뉴시스

내일 文대통령-5당 대표 회동... 日수출규제 중점 논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 청와대 회동이 내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두 시간 동안 열린다.

회동의 주된 의제는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 사태가 될 전망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16일 오전 여야 5당 사무총장 회의 뒤 브리핑에서 이번 회동에 대한 구체적 날짜와 시간, 의제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동에서는 일본의 보복성 수

출 규제 사태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정부로부터 규제 사태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고 이번 규제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대책 마련을 위해 초당적 협력 방안 마련에 나선다.

그밖에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이야기 가 오갈 예정이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5당) 협의 결과 지금 사상 초유의 한일 간 무역갈등이 벌어지고 있고 이것이 우리 경

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이 사안을 최단 시일 내 해결해나가기 위해 여야 5당의 초당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대통령과 청와대 회동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회동 의제에 관해선 “의제 외에 논의도 열어놓기로 했다”며 “작년 10월 이후 9개월 만에 모신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각 대표가 하고 싶었던 말씀들도 있을 것이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 없이 말씀을 청취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다”라고 답했다. /뉴시스

“고용환경 개선 통한 평등한 일터 조성 시급”

전북연구원, ‘통계로 보는 전북여성의 삶’ 이슈브리핑 발간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통계지표를 통해 전북 여성의 변화 및 주요 특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2019 통계로 보는 전북여성의 삶 이슈브리핑(200호)을 발간했다.

본 이슈브리핑은 통계청이 매년 양성평등 주간마다 발표하는 여성관련 통계지표를 중심으로 일부 통계지표를 추가·보완하여 작성했다.

여성인구 변화에서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일자리 교육문제에 따른 청년층의 인구유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4세의 청년여성 인구유출은 남성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이는 전체적인 가임여성인구의 감소와 맞물려 전북의 저출산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북의 인구정책은 ‘인구증가’에 초점을 두기보다 일자리와 주거 지원 등 ‘삶의 질 제고’를 통한 청년유출 억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전북의 1인가구는 전체

가구의 31.2%에 해당하고 이중 여성 1인가구는 전체 1인가구의 52.9%로 과반수를 상회하고 있으며 전국 평균 50.3%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연령대별 여성 1인가구 비중은 70~79세가 23.1%로 가장 높아 남성(7.6%)보다 15.5%p 높고 전국 평균(17.1%)보다 높다.

따라서 주거·안전·경제·복지 등에 취약한 (여성노인)1인가구의 생활 안정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고용이 불안정한 일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의 여성비율은 30.4%로 남성 19.2%에 비해 높으며 여성의 월평균 임금이 남성의 60.5% 수준에 불과하여 성별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성 49.6%, 남성 70.7%이며 경력단절여성은 기혼여성 총 인구의 16.0%에 해당하는 등 고용환경 개선을 통한 평등한 일터 조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여성의 공적연금가입자 비율은

2010년 39.8%에서 2018년 47.0%로 7.2%p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국 평균 여성비율(44.5%)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노후를 준비하는 전북여성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 52.2%에서 2017년 58.0%로 5.8%p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국민연금 의존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망원인으로는 악성신생물(암)로 남성이 여성보다 1.6배 많지만 알츠하이머(치매)는 여성이 남성의 3.6배로 나타났다.

전북은 80세 이상의 고령층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의 2배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만성질환과 노인의료비 증가 등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서는 여성노인 대상의 건강관리 정책을 강화가 요구된다.

조경옥(연구책임)박사는, 이번 ‘2019 통계로 보는 전북여성의 삶’ 이슈브리핑이 전북여성의 현재 위치와 삶의 변화, 남녀의 성별격차 현황 등에 대한 일반도민과 정책입안자의 이해를 촉진하고 향후 양성평등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북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 인재양성 시동

전북농식품인력개발원 신청자 146명 중 최종 52명 선정 예정

전북 스마트 팜 혁신밸리 청년창업 보육센터(농식품인력개발원)는 총지 원자 280명(2.7대1) 중 전북 농식품인력개발원을 희망교육기관으로 선택한 146명을 상대로 서류전형 및 심층면접 심사를 통해 52명을 오는 31일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 2개의 거점 교육 기관(전북 김제, 경북상주)은 오는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스마트팜에 특화된 장기

보육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한다.

전북농식품인력개발원 관계자는 146명(3대1)의 지원자는 전북의 농생명 산업과 스마트팜 밸리 조성 여건이 타 지역 보다 매우 우수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음을 판단하고 지원자가 몰렸다고 분석하고 있다.

도 농식품인력개발원은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은 9월 17일부터 영농 지식과 기반이 없는 청년이 스마트팜

에 취·창업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을 접목한 작물 재배기술, 스마트 팜 운영, ICT온실관리, 경영·마케팅 등 기초부터 경영실습까지 전 과정(최대 1년 6개월)을 교육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교육생의 자격 요건에 따라 청년농업인 스마트 팜 종합자금 융자 지원 혜택 자격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인력개발원 관계자는 전북스마트 팜 혁신밸리 구축을 기반으로 2020년부터 창업 지원을 전담할 스마트팜 보육센터 설립·운영 신규사업에 적극 참여해 명실상부한 최고의 농업교육기관으로 혁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국지성 집중호우 대응에 만전

전북도는 지난 15일부터 내린 국지성 집중호우로 남원시에 최고 147.5mm, 무주군에 67.0mm, 순창군에 42.5mm 등 도내 평균 24.5mm의 비가 내림에 따라 전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이번 내린 집중호우로 접수된 호우피해 상황은 건축물 피해 2건, 도로 피해 1건, 가로수 절도 1건 등으로 잠정 집계되었고, 전북도는 즉각 조치를 통하

여 피해를 최소화했다.

전북도에서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를 위해 5. 15일부터 여름철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재난관련부서 및 시군과 함께 침수우려지역 등 피해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과 시설을 중심으로 사전 점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왔다.

또한 시·군의 마을 방송 등을 이용, 도민들에게 호우 대비 사전 행동요령을 전파토록 했으며, TV 자막방송, 긴

급재난문자 등을 통해 기상상황 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알리는데 진력했다.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내에 국지성 집중호우가 예상된다는 기상전망에 따라 호우 피해 예방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도민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많은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산사태지역 및 침수침수지역 등 저지대 지역에 접근을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는 www.jjmaeil.com에서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